



- 인권주간 특집 ③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II편

인권교육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1. 9. 15. 연합뉴스

N번방 성착취 사건 후 1년...“아직도 범행 계속돼”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공론화해온 '리셋'(ReSET)의 활동가들이 강사로 나와 음성화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유형, 실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해자들도 조금은 움츠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가해자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 안전하게 본인들을 숨길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21. 6. 15. 연합뉴스

[반복되는 아동학대] 1년에 3만여건... 폭력에 신음하는 아이들

3일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45건으로 1년 전(2만4천604건)보다 약 22%(5천400여 건) 늘었다. 하루에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본 것이다.

증가 속도도 매년 가팔라지고 있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2011) 제3조에 따르면,
인권교육훈련(human rights training)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되며,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공공기관 직업훈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년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169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61곳에 불과합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유아, 학생, 종사자와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섭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공공부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기존 전통적인 인권보호의무의 주체인 국가뿐만이 아니라,
인권존중책임의 주체로 기업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갑질문제



산업재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장려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천에 관한 지침과 표준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통합적·체계적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